



내용문의	최유진 선임연구위원 ☎ 02-3156-7127
배포담당	황애리 언론담당 ☎ 02-3156-7296
배포일시	2026. 7. 3.(금) 오전
보도시기	배포 즉시

※ 매수 : 총 5쪽

## 인구감소시대, 성평등 추진 기반 갖춘 지역에서 여성 고용·지역 정착 효과 더 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구 감소 시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성과와 과제」 주요 연구결과 발표

98개 여성친화도시 평가자료와 기초지자체 5개년 패널자료 연계 분석  
여성 고용·지역 정착 효과 확인, 지역 여건에 맞는 인증·점검 기준과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연구 소개>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양질의 성평등 사업을 기획·추진하였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여성의 지역 정착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음.

분석 결과,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일수록 여성 고용률과 30~40대 여성인구의 지역 정착이 높아지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음. 이와 같은 결과는 인구 유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의 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일회성 사업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성평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여기서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이란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성평등 사업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가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은 「인구 감소 시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성과와 과제」(책임 연구자: 최유진 선임연구위원)의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다(「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1항).

\* 본 내용의 주요 출처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출처: 최유진·조선미·문희영·임연규(2025). 「인구 감소 시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9년 시작된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성평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10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주요 사업은 크게 ▲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지역사회 안전 증진, ▲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대표성 포함) 등으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전국 80개 시·군·구는 여성친화도시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43개 시·군·구는 모든 부서가 성평등 사업을 공동의 행정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평가(BSC)에 성평등 지표를 반영하였다.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 여성친화기업 인증은 13개 지역, 여성 경제활동 지원센터 운영은 7개 지역, 창업지원사업은 13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 여성친화적 일터 조성, 창업 지원 등 여성의 경제활동 기반을 넓히고 있다.
- 지역사회 안전 증진 : 조명, 비상벨, CCTV, 반사경, 안내사인 등 안전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16개 시·군·구는 시민과 행정의 함께 안전한 골목길 등 지역 안전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안전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 12개 지역은 마을 기반 돌봄사업을, 8개 지역은 일시보육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였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조례 제정, 돌봄노동자 일습센터 운영,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의 사업이 이루어졌다.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28개 지역이 여성활동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소모임, 시민참여단 활동, 정책참여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조선시대 여성 문인, 궁녀, 여성광부, 독립운동가 등 지역의 숨겨진 여성 인물 발굴·확산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성평등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사업도 추진하였다.

□ 이러한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들이 실제로 지역의 여성 고용과 지역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 본 연구는 2024년 기준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한 98개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 추진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2019~2023년 행정통계자료를 결합해 구축한 패널데이터와 연계하여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음. 분석에는 지역별 고유 특성을 통제한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해 지역 규모, 산업구조 등 지자체별 고유 특성을 최대한 제거한 상태에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30~40대 여성인구의 지역 정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계량분석을 실시하였음.

○ 지역마다 다른 고유한 특성의 영향을 제거한 후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효과는 개별 사업의 추진 여부보다 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담인력·예산·협업체계 등 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갖춘 지역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여성 대표성 확대, 여성 고용 향상, 30~40대 여성의 지역 정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성평등 정책이 지역의 정주 여건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여성 고용 효과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와 여성 경제·사회참여 사업이 함께 작동할 때 나타났다\*\*. 성평등 정책은 추진체계와 대표사업이 결합될 때 실질적 효과를 만든다는 점에서,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추진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는 여성 대표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전담인력 배치, 성평등 사업 예산 확보, 부서 간 협업체계 등 성평등 정책을 뒷받침하는 행정 기반이 여성 대표성 확대의 중요한 조건임을 확인하였음. 반면, 추진체계와 다른 정책요인 간의 교호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추진체계 구축만으로 여성 대표성이 크게 확대되는 것은 아니었음.

\*\*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와 여성 경제·사회참여 대표사업은 각각 독립적으로는 여성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추진체계와 대표사업의 교호항은 회귀계수 0.046( $p=0.02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으며, 다른 모형에서도 회귀계수 0.045( $p=0.031$ )로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음. 이는 여성 일자리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행정체계만 구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전담인력·예산·부서 간 협업체계 등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위에서 여성 경제·사회참여 사업이 함께 추진될 때 정책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또한, 성평등 추진체계의 성숙도와 사업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대표성이 확대되고 여성 고용률이 향상되며, 30~40대 여성인구가 지역에 정착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 최유진 선임연구위원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 효과는 단순히 사업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라며, “전담 인력, 예산, 부서 간 협력체계가 갖춰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함께 추진될 때 여성 고용과 지역 정착 효과가 강화될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 연구진은 핵심 과제로 ① 여성친화도시 필수지표와 선택지표의 단계별 구조화, ② 지역 성평등 여건에 따른 인증·이행점검 지표 세분화, ③ 지역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여성 고용·정착 사업 설계, ④ 분야별 여성친화도시 정책 협의체 운영, ⑤ 안심귀가길 등 중앙부처 협업 사업 발굴 ⑥ 여성친화도시와 안전, 참여, 돌봄 등 지원 사업 연계 추진 등을 제안했다.

□ 김종숙 원장은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 정책을 지역의 생활 여건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추진체계와 사업 지원을 더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했다.

---

\* 성평등 정책은 여성의 지역 정착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음.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평가점수는  $\beta = 0.251(p=0.021)$ , 정책 종합평가점수는  $\beta = 0.234(p=0.033)$ 으로 모두 30~40대 여성인구의 지역 정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여성친화도시 지정 여부 역시  $\beta = 15.744(p=0.009)$ 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음. 이러한 결과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성숙도와 사업의 질이 높을수록 여성의 지역 정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줌. 이와 같은 결과는 추진체계를 갖춘 지역에서 성평등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데, 효과의 정확한 크기 까지 단정하기보다는,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갖추는 것이 여성고용과 여성의 지역 정착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누리집-발간자료-연구 보고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감소 시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성과와 과제 | 과제 책임자: 최유진 선임연구위원**  
<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9&idx=133511>